

충남지역 중소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방안

한우호 | 충남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장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내경제 전망

지난해 말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부터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 세계에 상존해 있던 경제거품을 제거하면서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을 막론하고 전 세계의 실물경제 침체로 확산되는 과정에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주택가격의 하락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채권을 기초로 만들어진 각종 파생금융상품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이는 금융기관의 파산과 금융 불안 심화 → 주가 폭락과 신용경색 → 소비와 투자 위축 → 소득과 고용 감소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실물경제의 침체로 전이되고 있다.

또한 향후 실물경제 침체가 다시 금융위기를 심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유동성이 풍부한 저금리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대출수요가 급증하였고, 금융기관들은 대출분을 일으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물경기의 침체는 개인들의 실업 증가와 소득 감소, 기업들의 매출과 수익 감소로 부도의 가능성을 높여, 이는 다시 금융 불안을 야기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8년 하반기 이후 세계의 실물경기 위축이 본격화되면서 소비증가율은 2008년 1/4분기 2.8%에서 4/4분기 마이너스로 하락하였고, 세계경제성장률은 1/4분기 3.9%에서 4/4분기 0.5%로 급락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따른 금융 불안 완화와 경기부양에 대한 국제적 공조가 이루어지면서 실물경제가 2009년 하반기에는 다소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나 2009년 세계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에 그치면서 U자형 회복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2008년 초반 성장을 위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달러화 약세,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성장에 강력한 제동이 걸렸고, 이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겹치면서 국내 실물경기 침체로 이어져 급격한 수출 감소와 내수침체를 겪고 있다. 2008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 -3.4%, 전기 대비 -5.6%를 기록하여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정책당국의 유동성 지원 대책과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의 완화정책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위기상황은 일단 진정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으나 기업대출 연체율이 2007년 말 0.92%에서 2008년 말 1.46%로 상승하고, 어음부도율도 2007년 0.02%에서 2008년 말 0.04%로 증가하는 등 기업의 자금사정은 여전히 경색되어 있고, 환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시장의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다.

2009년 한국경제는 내수부진과 수출급감의 이중고의 골이 깊어지면서 경기하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수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작년 말 예측했던 3.0%에서 -2.0%로 현대경제연구소는 3.1%에서 -2.2%로 낮추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로 대폭 하향 조정하였다. 또한 선진국 경기침체의 지속, 보호무역주의 강화, 신흥국가들의 경기 둔화 확산으로 수출의 호조세도 크게 둔화되어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경제위기와 고용대란 전조

미국의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의 경제위기는 한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 침체를 가져와 가계소득의 악화와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국내 거시경제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경제 전망에 대한 불안은 신용경색으로 기업들의 자본조달의 어려움과 투자의 감소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생산과 고용의 축소로 이어져 고용빙하기의 도래를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생산, 소비, 투자, 수출 등 모든 경제지표가 하강하고 있으며 고용사정은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는 2,370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명이 감소하였고, 경제활동참가율은 59.5%로 전년동월 대비 0.8%p 하락하였다. 취업자는 2,286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 3천명이 감소하였고, 실업자는 84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 3천명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계절조정 실업률은 3.3%로 나타나 2001년 이후 실업률은 변함없이 3%대를 기록하고 있어 현재의 고용성과 부진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의 국책연구기관들은 2009년의 경제전망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으로 전망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실업문제의 심각성이 현실화되자 노동부 장관이 정부의 안일한 전망에 대해 사과하기에 이르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올바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미시노동지표를 분석하는 세밀함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정인수(200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8년 11월 고용유지지원 인원 및 지원액은 전년동기대비 77%가 상승하였고, 12월에는 118%나 증가하였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는 전년동기대비 25% 증가하였고, 지급액은 30% 증가하여 고용대란의 전조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정인수(2009)는 국책연구원들의 비교적 낙관적인 경제전망을 기초로 2009년 경제성장률을 1.3%로 예상했을 때도 취업자 증가는 -2만 명, 실업자수 92만 명, 구직 단념자와 취업 준비자를 포함한 광의의 실업자수는 17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이수연(2009)은 통계청의 실업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통계청의 '고용동향'을 기본 자료로 실질실업률¹⁾을 계산하였으며, 2008년 12월의 실질실업률은 11.6%로 공식실업률인 3.1%의 3배를 넘고, 실질실업자는 2007년 12월 278만 명에 비해 2008년 12월에는 302만 1천명으로 24만 1천명이 늘었다고 주장하였다.

〈표 1〉 실업급여 수급자 및 지급액 추이

구 분	2007년			2008년		
	3/4분기	3/4분기	3/4분기	3/4분기	11월	12월
수급자수	388,541	244,601	242,135	445,631	274,802	303,007
증감률	2.8	9.5	10.1	14.7	12.3	25.1
지급액	607,551	200,029	191,079	749,526	221,001	248,746
증감률	11.8	16.0	17.0	23.4	10.5	30.2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최근 추세로 보았을 때 2009년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 점차 확실해지고, 2009년 1월 현재 실업자수는 이미 84만 8천명에 달했고, 올해안에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며 유사 실업자도 400만 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실업대란의 문제는 과거 1998년 IMF위기와는 근원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를

1) 실질실업률 = (실업자+18시간 미만 노동자 중 추가취업희망자+취업준비자+그냥 쉬고 있는 사람) / (경제활동인구+취업준비자+그냥 쉬고 있는 사람)×100

비롯한 사회 전체가 경제위기의 장기화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1998년 IMF위기 당시는 위기가 시작과 함께 빠르게 심화되었으나 세계경제의 호조전과 IT붐으로 상징되는 내수의 회복에 힘입어 빠르게 극복하는 V자형으로 단기고용안정을 주종으로 하는 단순고용전략으로 위기 대응이 가능하였으나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는 세계적 규모로 전개되고 있어 경기저점 지속기간이 2년 내지 3년 이상 장기화되는 U자형 내지 욱조형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New Deal 사업」

글로벌 금융위기의 확산으로 전 세계 실물경제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도 수출의 급감, 내수부진, 실업대란 등 유례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이에 정부는 2009년 1월 6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향후 4년간 50조원의 재정을 녹색뉴딜사업에 투자해 95만6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환경을 보호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녹색뉴딜사업은 자원절감형 경제사업, 녹색사회 인프라 구축사업, 저탄소 고효율사업 등 4대 분야에 걸쳐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으로 추진된다. 9개 핵심 사업으로는 4대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사업(18조원), 녹색교통망 구축(11조원),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구축, 대체수자원 확보 및 친환경 중소담 건설, 그린카·청정에너지 보급, 자원재활용 확대,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에너지 절약형 그린홈·오피스 및 그린스쿨 확산,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 조성 등에 총 39조원을 투입하여 69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27개 연계사업에 총 11조원을 투자하여 27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녹색뉴딜사업은 기존의 녹색성장정책을 포함해 저탄소 친환경 자원절약적 공공투자사업 등을 통해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대량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의 취지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부의 녹색뉴딜사업은 사업의 핵심이 친환경에너지가 아니라 4대강 및 연계사업에 2012년까지 18조원을 투입하고, 경부·호남고속철도의 조기 개통 등 사업예산 50조원 가운데 사회기반시설 투자 관련 부문이 32조원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에 진정한 의미의 녹색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연구개발 예산은 2012년까지 3조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창출 측면에서도 녹색뉴딜사업과 관련한

〈표 2〉 핵심·사업 재정소요 및 일자리 창출규모

사업명		2007년			2008년		
		기반영 ('09)	추가소요 (~'12)	계	기반영 ('09)	추가소요 (~'12)	계
합 계		43,626	456,866	500,492	93,360	863,060	956,420
핵심 사업 9개	4대강 살리기 등	4,881	139,895	144,776	7,000	192,960	199,960
	녹색 교통망 확충	18,349	78,187	96,536	25,042	113,025	138,067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250	3,467	3,717	816	2,304	3,120
	우수유출시설, 중소댐	1,845	7,577	9,422	3,063	13,069	16,132
	그린카 및 청정에너지보급	3,209	17,318	20,527	1,643	12,705	14,348
	폐기물자원 재활용	506	8,794	9,300	2,377	13,819	16,196
	녹색 숲 가꾸기	3,131	21,043	24,174	22,498	148,204	170,702
	그린 홈, 그린스쿨 사업	-	80,500	80,500	-	133,630	133,630
	eco river 조성 등	52	4,786	4,838	393	10,396	10,789
연계 사업 27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137	19,901	25,038	8,529	33,038	41,567
	클린코리아 실천사업	437	1,666	2,103	3,236	11,310	14,546
	수변지역 녹색화	331	7,669	8,000	827	19,073	19,900
	환송시설 구축	1,782	3,396	5,178	2,959	5,639	8,598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200	1,544	1,744	253	1,955	2,208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	4,980	4,980	-	8,268	8,268
	자전거 급행도로 시범사업	-	3,000	3,000	-	4,980	4,980
	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	340	340	-	760	760
	전자문서 활용촉진	-	800	800	-	8,430	8,430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400	2,199	2,599	-	7,767	7,767
	해외 물산업 진출	199	1,790	1,989	171	1,281	1,452
	해수담수화 기술개발	246	878	1,124	1,700	5,700	7,400
	하수처리수 재이용	403	3,364	3,767	431	5,570	6,001
	그린카 독자기술력 확보	414	1,522	1,936	42	154	196
	바이오에탄올 차량보급 확산	-	30	30	-	60	60
	바이오에탄올(E5) 등 시범보급	-	272	272	-	575	575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362	10,858	11,220	2,853	21,519	24,372
	바이오매스 생산기반 구축	546	2,262	2,808	582	4,343	4,924
	사용종료매립지 재개발	-	5,300	5,300	-	9,230	9,230
	재해예방, 훼손산림 복원	786	6,541	7,327	8,430	44,218	52,648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65	816	881	420	2,710	3,130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95	755	850	95	755	850
	공공시설 LED조명 교체사업	-	13,356	13,356	-	10,030	10,030
	그린IT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	100	100	-	10,000	10,000
	그린홈 닥터 양성	-	160	160	-	1,332	1,332
	건물옥상, 벽면녹화사업	-	1,130	1,130	-	2,800	2,800
	에코로드 조성	-	310	310	-	920	920
소규모 유희시설 문화공간화	-	360	360	-	532	532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건설사의 기술, 관리직 3만5,000여명을 제외하면, 92만여명은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단순노무직으로 정상적인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경기침체 속에서 50조원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녹색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술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으로 재정적자만 확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제기되고 있고,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 가운데 건설과 단순생산직이 전체의 95%를 넘을 것이라는 분석을 감안하면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 성격이 강하여 경제 환경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정책 반복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제정책의 효과와 부작용

전 세계의 경기가 동반 하강추세가 가속화되고, 내수와 수출의 동시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을 맞아 세계 각국들은 다양한 경기부양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은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정부개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시장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개입은 크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경기부양책으로 정부지출 확대나 감세 등 유효수요의 확대를 통한 생산증대를 도모하고, 이는 다시 소득증대로 이어져 민간의 수요를 증대시키는 승수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케인즈학파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이론적으로는 통화의 팽창이나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도 기업의 투자를 늘림으로써 생산을 확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제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는 경기침체의 원인이나 경제주체들의 반응, 제도적인 요인 등 경제 환경 요인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예를 들면,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경기부양 효과는 이자율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경우 금리인하가 수요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많은 연구결과에서는 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이자율보다 미래소득에 대한 기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와 같이 경제전망이 어두울 경우에는 금리인하가 민간 투자로 바로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재정정책의 경우는 현재와 같이 극심한 수요위축 상황에서는 통화정책보다 경기부양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재정지출의 확대는 생

산과 소득의 증대를 통해 민간수요를 부양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공재 등 외부효과가 큰 부문에 투자할 경우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지출은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서의 시차가 길게 나타나고, 행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효율성이 발생하기 쉽고, 또한 시장기능이 배제된 정부의 선택이 비효율적인 부문에 투자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공공재 투자 등 재정지출이 민간부문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될 경우는 경제성장잠재력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투자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경제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비효율적인 투자는 수익성이 담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의 보수 및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재정투입이 요구되는 재원낭비를 초래할 것이다.

현재의 경기하강은 지난 수년간 과잉소비에 의한 고성장과정에서 누적되었던 경제의 거품들이 해소되는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즉 민간의 자생적 수요기반이 충분히 갖추어지기 전에 과도한 부양책을 추진할 경우 일시적으로 경기가 다소 회복되어도 정부의 재정지출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시장개입은 한계에 부딪칠 것이므로 부양책이 중지될 때는 다시 경기가 위축되어 불황의 장기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선진국들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친환경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부문에 투자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도 경기부양과 동시에 경제성장잠재력 제고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앞에서 언급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녹색뉴딜정책은 경제위기, 고용위기, 환경위기 등 3중고 극복을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으나 내용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지적을 받고 있다. 첫째, 단순노무직 중심의 단선적인 고용전략으로 지식기반경제사회의 성숙이라는 세계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녹색뉴딜이라기보다는 건설업 중심의 SOC 투자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성장이 자동적으로 고용창출로 이어진다는 개발도상국시대 패러다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셋째, 정책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영향평가를 제시하지 못하고 과거의 정책을 반복하고 있어 현실에 맞는 고용전략의 비전과 계획이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단기적인 경기부양책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충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방안

전통적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성장해 온 한국경제의 특성상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안 및 세계경제의 침체는 외환위기시와는 달리 세계적 규모로 위기가 전개되어 내수부문뿐만 아니라 수출부문의 일자리 전망조차 크게 위축시킬 것이며 침체기간도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소비 및 수출 수요를 급격히 감소시킴에 따라 기업의 신규인력 채용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인력구조조정 또한 어떤 방식으로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제조업, 영세 서비스업 그리고 비정규직 등 한계상황에 있던 부문에서 자연스레 시작된 고용 악화는 2009년에는 정부와 기업들이 주도하는 인위적 인력조정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008년 경제위기에서는 외환위기 시 재벌기업과 금융기관을 희생시킨 것과는 달리 우리 경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중산층,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 지역경제를 희생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며, 건설투자를 비롯한 공공사업 중심의 1930년대식 뉴딜이 아니라 인적 자원개발 투자와 녹색투자 중심의 새로운 뉴딜이어야 한다. 또한 경제위기의 영향은 기업경영여건 및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중소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경제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용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3〉 충남의 산업구조

(단위 : 백만원, %)

구분	1995년		2000년		2006년	
	부가가치액	구성비	부가가치액	구성비	부가가치액	구성비
전국	438,016,770	100.0	514,658,056	100.0	677,541,005	100.0
1차산업	22,638,824	5.2	23,750,741	4.6	23,272,731	3.4
2차산업	115,433,855	26.4	151,029,545	29.3	221,275,690	32.7
3차산업	299,944,091	68.5	339,877,770	66.0	432,992,584	63.9
충남	18,762,587	100.0	25,782,995	100.0	39,489,518	100.0
1차산업	2,654,037	14.1	3,157,719	12.2	3,197,127	8.1
2차산업	5,252,191	28.0	10,081,660	39.1	18,830,555	47.7
3차산업	10,856,359	57.9	12,543,616	48.7	17,461,836	44.2

주 : 2000년 기준 불변가격

충남경제의 특성을 살펴보면, 산업구조는 1995년~2006년 사이 2차산업의 비중은 25.1%에서 41.6%로 증가하여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1차산업의 비중은 전국 평균에 비해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아직도 농업이 지역경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은 종사자수 기준으로 볼 때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업, 음식료품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순으로 특화되어 있다. 충남의 수출입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1월부터 8월까지 교역규모는 509억7,700만불로 전국의 8.6%를 차지하였다. 그 중 수출은 300억5,900만불로 전년동기대비 0.5% 감소하였고, 수입은 209억1,800만불로 전년동기대비 23.7%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전년동기대비 31.2% 감소하였다.

충남지역의 경제현황은 제조업의 비중이 매우 높고 국가 주력산업인 전자정보기기산업, 자동차부품산업, 석유화학산업에 특화되어 있으며, 수출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금융위기로 인한 내수부진과 수출 급감에 따른 영향이 타 지역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은 시장실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번영을 목적으로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어 인위적으로 창출하려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의한 금융정책 실패의 결과였다. 깊어가는 경제위기를 시장경제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으로 회귀할 수 있는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 기조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의 양극화를 극복하는 동반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금융주도의 경제가 아니라 지식주도의 경제로 나아가야 하며, 대-중소기업간, 수도권-비수도권간 동반성장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 환경 변화에 적합한 정책의 추진을 통해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면서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잠재력을 제고함으로써 고용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단기적 일자리 창출 중심의 단선적인 고용전략보다는 고용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가 순환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복합고용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기존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은 기술진보의 가속화로 제조업 부문의 투자에 대한 고용유발효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고용창출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고, 또한 경제·산업, 노동시장, 교육정책이 효율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경쟁력의 취약점을 해소해 나가면서 동시에 해당분야에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해나가는 지역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그리는 능동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산업, 노동시장, 교육정책이 효율적으로 연계되는 실용주의적 복합고용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에 적극 투자하여야 한다.

과거의 소품종-대량생산방식 하에서는 소수 대기업 중심의 발전전략이 유효했지만, 현재와 같은 다품종-소량생산방식 하에서는 기술력을 갖춘 다수의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전통적으로 제조업과 중소기업이 강한 일본, 독일, 대만 등은 외부의 충격을 비교적 잘 흡수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면서 연체율이 크게 증가하는 등 외부의 충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식기반경제 하에서는 기술진보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이에 적시에 부응하며 성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일자리 창출과 국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파급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셋째, 건설업 등 SOC 투자보다는 융합산업 및 녹색성장산업 등 미래성장동력산업에 투자 비중을 높여 국가의 중장기적 경제성장잠재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는 현실에서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정책의 최우선 목표인 국가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이루어지는 재정지출 확대인 만큼 전후방효과가 큰 산업에 투입하여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산업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충남의 경우 자동차산업, 전자정보기기산업, 석유화학산업 등 우리나라 주력기간산업의 집적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핵심부품이나 원천기술은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산업에 대한 핵심 부품·소재의 원천기술 확보 및 글로벌 공급기지화 구축, 대기업과 부품·소재기업간의 연계 강화,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등 산학연관 협력 강화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장기 경제성장을 위한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핵심 인적자원 및 연구개발 역량 축적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산업의 고도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산업의 고도화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핵심인재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지속적인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R&D 투자와 더불어 숙련된 인적자원 육성이 이루어져야 하

고, 이들 인적자본이 다시 성장을 견인하는 선순환 패러다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제 위기 상황 하에서도 단기적 실업대책에 국한하지 않고 인적자본 보존과 축적을 위한 투자를 병행해야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구직난 속의 구인난'이라는 만성적인 인력수급의 불균형으로 전문 인력과 기능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대를 중심으로 실무형 기능인력 양성, 지역의 특화산업 관련 전문대학원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다양한 지역사업에 대한 종합평가관리시스템 구축과 경제사회 양극화를 해소할 사회 안전망도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

경기부양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역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상시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체계의 부재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 및 성과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미비되어 유효한 정책을 체계화하지 못하였다. 지역사업들에 대한 종합평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고용위기에서 타격을 받을 대상이 취업 취약계층인 중소기업 근로자, 여성·청년, 고령자 및 자영업자에 치중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들에 대한 취업촉진을 위한 지역고용인프라의 실질적 구축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실직자,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진보의 가속화와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해 경제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새로운 산업들이 생성되고 많은 전통산업들이 사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산업 환경 변화에 맞는 고용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직업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평생학습체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기획재정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사업 추진방안," 2009. 1.
2. 송태정 외, "글로벌 경제, 위기 수위 높아지나," LG경제연구원, 2008. 12.
3. 이근태, "경기부양책, 극복해야 할 제약요인," LG Business Insight, 2009.
4. 이수연, "실질실업자 300만명 돌파, 실질실업률 11.6%,"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2009. 1. 22.
5. 전병유,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 고용전략,"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07.
6. 전용일·김주섭, "미국발 경제위기가 한국의 거시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09. 11.
7. 전재영 외, "2009년 국내 10대 트렌드," 삼성경제연구소, 2009. 1.
8. 장인수, "고용위기 진단과 정책대응," 고용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심포지엄, 한국고용정보원, 2009. 1.
9. 조준모, "글로벌 금융위기 하의 선진국의 복합고용전략과 한국에의 시사점," 고용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심포지엄, 한국고용정보원, 2009. 1.
10. 허재준 외, "최근 노동시장 평가와 2009년 전망,"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09. 1.
11. 현대경제연구원, "고용 빙하기의 정책과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경제주평, 2009. 1. 23.
12. 현대경제연구원, "중소기업 위기극복 핵심과제," 한국경제주평, 2008. 12.
13. 황인성, "2009년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전망," 삼성경제연구소, 2009. 2. 11.